

7기 통일아카데미 1강

#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구상

김병로

#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구상

## 1. 통일의식의 변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한국의 현대인들에게 통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구시대적 이념에 집착하는 기성세대의 편집증적 행태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우리 시대에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 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통일을 자꾸 끄집어내는가.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2009년 7월에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보면, 55.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6%는 “필요하지 않다”, 23.6%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68.3%를 차지하며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7.5%에 불과하다. 20대의 경우에는 28.5%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5.3%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익)이 안된다”, 그리고 76.9%는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벌써 두 세대나 되는 남북의 국민들이 분단 이후 한반도에 태어나 삶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한국국민의 90%가 분단과 전쟁 이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분단 6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 국경의 남쪽에 사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체제에 익숙해졌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줄고 있다. 처음엔 남북분단이 부자연스러웠을 테지만 분단이 두 세대가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분단의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분단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 분단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든 혹은 수동적으로 적응하였든 간에 많은 한국국민들은 이제 분단의 환경을 그리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단 극복, 즉 통일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살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오히려 남한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주시하면서 분단 이후 한반도 땅에 건설된 남과 북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21세기적 통일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 지 살펴보자.

## 2. 분단현실: ‘한국’과 ‘조선’

### 1) Two Koreas: States or Nations?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땅을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로 구분하여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남쪽을 남한으로, 그리고 북쪽지역은 북한이라고 부르는데 꽤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밖을 조금만 벗어나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회에서는 남한이라는 말 대신 ‘한국’을,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

한 단어일지 모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연해주를 한 두 번 정도 왕래한 사람들이라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줄여서 자기 나라를 보통 ‘조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90년대 초반 이러한 호칭문제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이 매우 불편하였다. 한반도에 관한 학술대회를 하더라도 남측은 한반도라 부르고, 북측은 조선반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남북간에 명칭에 대한 합의가 매우 어려웠다. 오랜 논의 끝에 ‘코리아반도’로 합의를 했고, 한민족에 대해서도 한민족과 조선민족을 서로 주장하여 결국 ‘우리민족’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이 ‘한’(韓)자를 싫어하고 우리는 ‘조선’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무난하게 ‘코리아반도’라는 영어명칭을 사용하며, 남북학술회의 때는 한(조선)반도라는 병기 형태를 활용하곤 한다. 그래야만 남북한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사이에는 영어명칭이나 병기방식을 탈피하여 ‘고려반도’ 등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고려’하는 어휘가 워낙 ‘고려연방제’라는 북한쪽의 이미지로 전달되어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고려하는 용어를 먼저 제안하고 선점했다는데서 고려라는 용어를 선뜻 사용하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옛소련 연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고려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고려라는 용어가 괜찮을 듯싶다. 한국과 조선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남북한의 분단현실이 이런 이상적인 사고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긴장되고 각박한 느낌을 갖게 된다.

분단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억하는 세대는 대개 한국과 조선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기보다는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작은 국가’(혹은 정권)으로 분할되었다고 여긴다. 물론 집권층에게는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체제만을 정당한 국가로 간주했을 것이다. 분단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단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남과 북으로 나뉜 ‘불완전한 작은 국가’는 통일을 통해 ‘완전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된 국가만이 근대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길이었으므로 통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60여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고 한국과 조선은 state으로부터 nation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조선과 한국의 이미지

한반도의 남쪽과 북녘 땅에 실재하는 ‘한국’과 ‘조선’은 각자 자기편에서 편리하게 부르는 ‘북한’과 ‘남조선’과는 매우 다를지 모른다. 북한사람들에게 남조선은 해방되어야 할 식민지이다. 그들의 눈에는 남조선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연일 반정부 데모를 일삼으며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붕괴하고 말 취약한 사회이다. 그 뿐 아니라 북한사람들에게 남조선은 돈 때문에 각종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끔찍한 곳이다. 미군이 물러가지만 하면 남조선 인민들은 김일성주석, 아니 이제는 김정일장군을 우려러 모시기 위해 쌍수를 들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 올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휴전선 남쪽에 건설된 한국은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발전하는 사회요, 월드컵 4강의 나라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북한이 상상하는 ‘남조선’이 허구이듯, 남한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지금은 김정일과 그 일당들의 압제에 못이겨 참고 있지

만, 김정일만 죽으면 자유의 품 대한민국으로 쌍수를 들고 달려 올 그런 북한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역시 그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1980년대 말 미동부의 유수대학(MIT)에서 유학중인 이재환이라는 학생이 북한으로 귀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평양의 귀순기자회견장에서 남한사회가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남한사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을 들추어내어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사실 자체는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사회의 극히 일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실체를 왜곡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아픈 곳,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 있는가 하면 밝고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곳도 많다. 탈북자들로부터 듣고 있는 북한 이야기는 어떤가?

### 3. 교류협력 증대와 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은 스포츠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권과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이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공산주의 국가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7.7선언(북방정책)을 단행하였다.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선언한 7.7선언은 한반도 이념 지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7.7'선언 이후 한소수교(90년), 한중수교(92년), 남북간에는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선 합법적 남북교류 시대, 한반도 탈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허물지 못한 이념의 높은 벽을 스포츠가 허물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인적 왕래와 교류협력이 급증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이전까지 연간 17만명의 방북자와 40만명의 금강산 관광과 10만명의 개성관광 교류가 진전되었다. 물적 교류는 연간 18억 달러, 이산가족 1만2천명 상봉과 면회소 건설, 남북자 송환 논의 등 통일환경이 달라졌다. 2008년에는 북미간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제거했고 북한의 테러국가 지정 해제를 단행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09년 5월 북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군사제재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도 발생하여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북중간의 왕래와 교류 증대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 1) 국가성의 강화

한국과 조선은 1991년 9월 두 개의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국가성을 과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Two Koreas를 인정받게 되면 통일의 정당성은 그만큼 약화된다. 남북한은 상호간에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서의 존엄을 갖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 실제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담아 표현하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서 한국과 조선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양국관계를 규정하였다.

국가의식 또는 국민의식은 가장 대표적으로 국기와 국가라는 상징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국가상징을 통해 국민정체성을 확인하며 서로 다른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준다. 남북이 아직도 양국의 국기계양이나 애국가를 허용하는데 금지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남북은 동질적이기보다 이질적인 느낌을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북한은 대외적 행사에 사용하는 애국가와는 별도로 대내행사와 모임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더 많이 부른다.

(북한의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 /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남한의 애국가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반면, 북한은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라며 조선을 노래한다. 애국가에도 한국과 조선이 분명히 나뉘어 있고, 각자 자신들이 믿는 한국과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하며 노력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조선의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두 나라의 국가의식 또는 국민의식이 강화되었고, 민족의식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남북간의 교류와 왕래, 협력이 진행되면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류협력은 민족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갈등으로 국민의식을 더 공고히 하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조선이 같은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의 부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민족의 공통분모를 한인이라고 해야 할지, 조선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일치된 의견이 없다. 북한은 이러한 언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2) 비대칭성의 확대

남북한 및 해외의 교류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한국과 조선의 이미지 균형도 달라지고 있다. 2003년 10월, 연해주에서 고려인의 문화축제 당시, 고려인 사회자(여성)가 북한 총영사를 부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 않고 북한총영사로 불러 총영사가 단상에 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다. 조금 후에 정정하면서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영사로 부르자 단상에 올랐다. 예전에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당연하게 여겼으나,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고려인들도 조선을 북한으로 부르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조선족과 고려인 등 해외동포사회에서 한국으로의 민족의식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간의 교류협력 증대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국과 조선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에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과 조선의 경제력이 점점 벌어지면서 탈냉전 이후 한국과 조선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있다. 극도로 열악한 북한의 경제는 남한사람들에게 매우 이질적인 체제임을 느끼게 한다. 1976년 국가부도를 맞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많은(수백만)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나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구호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1998년부터 사회질서가 회복되었으나 극심한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39달러(95년), 457달러(98년)로 500달러 이하이며, 월평균 임금은 2000-3000원으로, 공식환율(달러당 150원)로는 20달러지만, 시장환율(달러당 3000원)로 계산하면 1달러에 불과하다.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과 미국 및 IMF의 국제금융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테러국가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 3) 이질성의 심화

언어, 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고 역사 해석과 역사의식에서 이질성도 커졌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부를 때 ‘한’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줄인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의 한국의 북쪽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한국이나 남한, 북한 처럼 ‘한(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기 거부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를 ‘남조선’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북한이 한국을 조선이나 조선민족으로 부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굳이 조선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대해서는 우리를 사회주의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하여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조선과 한국의 명칭과 역사해석에 대한 갈등은 삼국시대와 직전 역사를 두고 가장 격렬하게 표출된다. 분단 이후 남한(한국)에서는 신라 중심의 역사해석을 내려왔다. 대한민국은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라중심의 역사해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삼한정통론 같은 역사해석을 부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고구려 중심의 역사해석을 한다.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주체적이었던 역사로 서술하는 반면, 백제와 신라사는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서술한다. 특히 신라사는 외세에 의존한 만민족적인 역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은 고구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부여의 역사를 부각하는 흐름으로 발전하였으며, ‘후기신라’보다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우리민족이 고조선 시기 이후 맥족(貊族)과 한족(韓族)으로 나뉘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맥족은 북쪽지방에서 부여를 건국하고, 정통성이 고구려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한(韓)족은 서남쪽으로 내려와 진(辰)국을 건설하고 마한을 본거지로 하여 진한, 변한을 통치한 것으로 설명한다. 1994년 10월 단군릉을 복원하면서 단군의 넷째 아들을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군의 역사화를 통해 부여의 정통성 확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해방이후에 남북한이 각각 신라와 고구려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서로 자기 쪽이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이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면 좁디좁은 한반도 땅에 북방계 민족과 남방계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역사도 북쪽중심의 역사와 남쪽위주의 역사가 분열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 4) 적대성의 잠재

남북한 사이에 놓인 상대에 대한 두려움, 선입견, 적대감 등은 교류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심리와 사회구조에 깊게 뿌리 내려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체제를 건설하였으며, 전통적 가치와 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어 국가권위가 압도하고 있다. 또한 전쟁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건설하며 적어도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지역자립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해 북한식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피해자가 상층 기득권 세력이 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을 신앙으로 간직하고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유일적 지도체계와 철저한 조직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북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 4. 통일비전: 통일은 왜?

통일을 향한 비전은 당위론에서 벗어나 21세기의 변화된 한반도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명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남북한의 국민들이, 특히 남한(한국)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론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적 통일비전은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분단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분단이 초래한 엄청난 폐해를 깊이 있게 자각하면 할수록 통일의 비전은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남북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그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분단에 대한 열망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다.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됨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분단체제에 매우 익숙해졌고, 분단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어버렸다. 분단구조에 함몰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 통일비용보다 엄청난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는 분단이 초래한 지리적 폐쇄성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지리적 밀폐공간으로 전락하였다. 지리적인 밀폐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의식과 가치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통행협상을 시작하고 대륙으로 진출로인 동서해안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통일이란 결국 남북의 생활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더 넓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대륙으로 통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대륙으로 통하는 공간적 열림의 시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일비전이다.

둘째, 분단이 빚어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분단대결 상황에서 남한경제는 북한의 '위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휴전선에 2백만명의 병력과 엄청난 화력을 쏟아 붓고 있다. 남북한이 40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즉 남한이 인구비례로 가정하여 27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국방비지출과 보유병력의 축소만을 통해 연간 평균 4-5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sup>1)</sup> 남북한 총군사비 연간 230억 달러 가운데 남한만 보더라도 4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여 경제건설에 전환할 수 있다. 200만의 병력을 30-40만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과 신의주 고속도로를 연간 5개 건설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다.<sup>2)</sup> 이러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두고 남한이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는 없다. 비효율적 분단체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셋째, 분단으로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분단이 만들어낸 최대의 폐해다. 남북 분단체제는 남북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며 갈등과 투쟁으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북간 사회내부에 분단구조를 내재화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적 대립과

1)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7.6.5), p. 99.

2) 「연합뉴스」 2000.5.24.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하였다. 분단상황으로 인한 적대관계와 전쟁위기의식은 남북한 주민을 전쟁의 위험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뢰(trust)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21세기에 분단극복은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역사를 돌아보며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과 구소련의 일방적 결정으로 강요된 것으로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전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단행한 것이었다. 이른바 알타회담, 포츠담선언, 모스크바3상회의 등을 통해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기 위해 한반도를 분할한 것이다. 일본에게 전쟁을 책임을 물으려면 일본땅을 분할점령해야지 왜 한반도를 분할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한반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차적으로 순전히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분단이 북한의 남침전쟁으로 고착화된 책임은 북한이 져야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극복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야 할 것이다.

## 5. 21세기적 통일구상: 통일은 어떻게?

통일의 과정에서 이질적 생활양식과 가치관, 적대의식이 맞부딪히면서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남북간 인적 왕래와 교류협력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이념갈등을 볼 때 상호배제와 대결에 익숙해진 분단구조를 탈피하여 민족의 통일과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단체제의 내재화, 내면화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 모두의 심층적 내면구조에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남과 북에 둘러쳐진 폐쇄적 울타리를 헐고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불편함과 갈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통일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추진동력으로서 연료가 필요하며, 둘째는 자동차를 움직일 엔진이 필요하다. 셋째는 자동차의 방향을 안내할 운전기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도로사정이 좋아야 한다. 첫째, 통일의 추진동력은 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구성원들의 열망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통일의식 수준도 중요하지만, 특히 북한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과 열망이 중요하다. 독일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이 정치대화, 외교협상,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선호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통일구상의 핵심이다.

둘째, 통일을 추동하는 엔진은 주민들의 통일열망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나 정치적 선거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주민들의 고조된 열망을 집단적 의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중시위나 정치적 참여가 중요하다. 북한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은 통일의 엔진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의 엔진은 EU모델을 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경제공동체→사회문화교류 증대→정치적 통일로 이어지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운전기사의 역할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집단과 개인들의 사정, 국가의 경제형편을 감안하여 통일의 속도를 조절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더없이 중요하다. 통일을 만들어갈 리더십

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비전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고 정서적 설득을 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soft power, smart power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도로사정이다. 도로사정은 바로 국제상황이며 도로사정을 얼마나 평탄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외교력에 달려있다. 미, 일, 중, 러의 주변4국과의 통일외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외교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9년 7월 이후 중국의 한반도 개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변화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경제·군사 전략에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가? 개성공단과 같은 통일엔진을 어떻게 만들며, 통일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